

주간 통일정세

2016-01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北 대남일꾼 “대담한 대화로 북남관계 개선하자”(1/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소속 최령진이 “당리당락과 주의주장을 초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 실현의 기초로 되며 북남관계 문제, 통일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고 주장했음을 보도함.
 - 매체는 그가 “북과 남은 지난 6·15 시대의 귀중한 경험을 적극 살려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대담하게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상, 협력과 교류를 실시해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북과 남은 과거에 얽매이기 전에 민족의 장래부터 생각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민족의 대의를 이룩하기 위한 길로 손잡고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함.
- 조선총련 산하 평통협 “굴욕적 합의” 비난(12/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연 합회(조선총련) 산하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평통협)가 “굴욕적인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민족적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29일 리동제 협회장의 담화문을 내고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는 성노예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으며 일본 정부가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리 협회장이 “남조선 당국은 일본 집권자의 국가적인 책임도 법적 책임도 밝히지 않는 사죄니 반성이니 하는 말을 받아들여 성노예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했으니 이처럼 굴욕적인 대일 외교가 또 오데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38노스 “북한, 풍계리 새로운 핵실험 터널 굴착 계속”(12/30, 38노스)
 - 38노스는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핵실험 터널을 만들기 위한 굴착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자로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관독한 결과 “새로운 서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위한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30일 보도함.
 - 38노스는 굴착 중인 새로운 터널의 입구 위에 떨어지는 잔해들을 막기 위한 덮개가 설치돼 있고, 터널을 빠져나와 다리를 건너도록 되어있는 광산 수레 궤도가 관찰됐다고 설명하면서, 현재로서는 언제 공사가 마무리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임.
- 화생방호사령부 “北 풍계리 새갱도 핵융합무기 실험용”(1/3, 연합뉴스)
 -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해 다양한 연구와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국군화방사)는 3일 발간한 ‘합동 화생방 기술정보’ 자료를 통해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 갱도를 굴착하는 활동은 핵융합무기 실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국방부 직할부대이자 화생방전 연구·작전 전문 부대에서 풍계리 새 갱도 굴착 용도를 ‘핵융합무기 실험용’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방부도 이런 평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국군화방사는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며 “증폭핵무기(증폭핵분열탄) 실험의 과정일 수 있으나, 수소폭탄의 직접적인 실험은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콘크리트장벽은 미국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과 그에 추종하는 南 군부독재자들이 감행한 매국 배족적 행위의 산물이라며 '진정 남북 사이의 평화와 화해를 원한다면 장벽해체의 용단을 내리라'고 주장(12.28, 중앙통신·노동신문)
- 청와대의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부분개각 관련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재집권 야망을 이루어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고위 인물들을 바꾼다고 보수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에서 변화가 있을리 만무하다'고 비난(12.29, 중앙통신·민주조선)
- 일본의 韓日 외교장관 회담 조치는 '진정성이 결여된 울며 겨자 먹기로 취한 간특한 조치'라며 남한 당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은 친일 사대매국적 정체만 폭로해줄 뿐'이라고 비난(1.2, 중앙통신·민주조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매체, 중국에 우회적 불만 표출...“전쟁 위기에 중립지켜”(12/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그 누구도 우리의 무진막강한 힘을 당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8월 남북한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조국 앞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밀려올 때 어느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신문은 이어 “일부 유관국들은 우리와 적대세력에게 냉정성과 자제력을 구하면서 중립을 지켰다”고 말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북·중·러, 새해맞이 행사 공동개최 예정(12/2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훈춘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북한 두만강시와 중국 훈춘시, 그리고 러시아 하산시가 내년 1월1일 두만강변에서 2016년 새해맞이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보도함.
 - 훈춘시는 두만강변에 인접한 북중러 3국 도시가 함께 일출을 보면서 각종 문예공연도 감상할 수 있도록 새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고, 또한 3국 간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새해맞이 행사를 지역과 시간을 나누어서로 상호작용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 中, 北 김양건 사망에 조의 표명…동지로 호칭(12/30, 연합뉴스, 신화통신)
 - 연합뉴스는 중국 정부가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의 사망과 관련해 조의를 표명했다고 30일 보도하면서,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는 김양건 동지의 불행한 서거(逝世·서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며 “그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음을 전함.
 - 뉴스는 루 대변인이 “김양건 동지는 중조(북중) 관계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힘써왔고 특별히 중조 양당의 고위층 교류·왕래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루 대변인이 애도 메시지를 표명하면서 김 비서를 ‘동지’로 수차례 호칭했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신화통신은 평양발 기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 비서는 김정일의 가장 가까운 전우에 속한다”며 그의 사망 소식과 생전 이력 등을 상세히 소개함.

바. 대일본

- 특이사항 없음.

사. 대러시아

- 北김정은에 각국 지도자 연하장…북한, 中보다 러시아 먼저 호명(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각국 지도자들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내왔다고 전하면서 지난해처럼 러시아를 중국보다 먼저 호명함.
 -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 인사들이 연하장을 보내여왔다”며 러시아 대통령, 중국 국가 주석, 몽골 대통령 등 순으로 이름 없이 직책만 소개하였는데, 이는 각국에서 연하장을 보내온 사실을 보도하면서 중국을 러시아 다음에 거론했던 작년과 같은 순서임.

- 北, 김일성 일가 선전 ‘평양센터’ 러시아에 개관(12/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지난 24일 평양센터(평양센터)가 로씨야(러시아)의 아무르주 과학도서관에서 개관됐다”면서 “개관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로작(노작)들과 위대성 도서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들이 전시돼 있었다”고 보도함.
 - 북한 당국이 평양센터를 해외에 개소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24주년(12월 24일)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4주년(12월 30일)을 계기로 러시아 아무르주에 평양센터를 열었다고 전함.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주한미군 탄저균실험 관련 ‘조선반도를 죽음의 세균전 폐허지대로 만들어보려는 악마의 제국’이라고 비난하며 ‘국제 전범자재판정에 스스로 나서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12.28, 중앙통신·노동신문)
- 주한미군의 탄저균 15번 실험과 페스트균 반입 관련 ‘우리(北)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한 미제의 범죄적 책동이 얼마나 무모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며 ‘이

- 문제는 국제 전범재판정에 상정되어야 하며 미국은 마땅히 준엄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12.29, 중앙통신·민주조선)
- 前) 美공군 무인기 조종사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항의편지(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사람들을 살해한 데 대해)를 보낸 것을 거론하며 '이 편지는 부정의를 정의라고 광고하면서 그 막뒤에서 온갖 인권 유린행위를 다 저지르고 있는 미국을 폭로·규탄한 양심선언'이라고 비난(12.29,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의 '△국방예산 증액, △무기수출 금지조치 해제, △최신군사기술 획득·신형 무장장비 개발('SM-3 블록 2A' 시험발사 등) 구입' 책동은 "군사대국화, 해외평창의 길로 나가고 있음을 세계 앞에 공공연히 선언한 것"이라고 경종(12.30,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의 '현재 32개의 사이버 전문부대를 41개로 확대 결정' AP통신 등 외신보도 인용, 이는 "미국이 사이버 공간까지 장악하여 세계제패 야망실현에 써먹으려는 것"이라고 주장(12.30, 중앙통신·민주조선)
 - 北 노동당 중앙총, 12월 30일 콩고 노동당 중앙총 앞으로 '콩고 노동당 창건 46주년' 축전(12.30,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12월 31일 '쿠바 혁명승리' 57돌 즈음 同國 내각 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스'에게 축전 및 駐北 쿠바대사관에 꽃바구니 전달(12.31, 중앙통신·중앙방송)
 - 러시아·중국·몽골·시리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베트남·산마리노 집정관들·알제리·앙골라 대통령과 국가 주석 등 각국 당과 국가수반들, 김정은에게 연하장(1.1, 중앙통신)
 - 팔레스티나 대통령(12.24)·나이지리아(12.21)·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장(12.28), 김정은에게 새해 축전(1.1, 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 중통기자 문답(1.1)】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관련 '국제적 정의와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정치적 흥정의 산물' 이라고 비난하고 일본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포함하여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에 대한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고 주장(1.1, 중앙통신)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수산부문 공로자에 표창장 수여(12/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 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 열성자 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이 12월28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가 수여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수여식에 앞서 "불리한 어황 및 일기조건 속에서도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사계절 바다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임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물고기잡이 전투에서 보기 드문 성과를 이룩했다"고

참가자들을 치하했으며, 참가자들을 ‘당 정책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라고 높이 평가함.

- 그러면서 “수산 전선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최전선”이라며 “수산부문에서부터 군인생활과 인민생활 향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것이 당 중앙의 의도”라고 말하였고, 연설을 마친 후 수산부문 근로자들에게 직접 표창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항일혁명투사’ 리영옥 사망·김정은, 빈소에 조화 보내(12/29,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일혁명투사’ 리영옥의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고 29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항일혁명투사 리영옥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지난 29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고 전하였으나, 리영옥의 사망 일자와 주요 경력, 항일 활동 상황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北 김양건 사망에 추모 분위기·김정은 장의위원장 맡아(12/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지난 29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서 30일 아침 김 비서의 장의위원회 구성과 위원 명단을 알리며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고 김양건 동지의 장의식을 국장으로 한다”고 보도하였고, 이에 장의위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맡는다고 전함.

■ 北 김정은, 김양건 조문·“영원히 잊지 않을 것”(12/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김양건 동지의 서거에 즈음해 12월30일 고인의 영구를 찾으시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김양건 동지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의 충실한 방조자, 친근한 전우였다고 말했다”면서 “싸늘하게 식은 혁명 동지의 시신에 손을 얹으시고 오래도록 격한 심정을 누르지 못해하셨다”고 전했으며, 김 제1위원장은 또 “금시라도 이름을 부르면 (김양건이) 눈을 뜨고 일어날 것만 같다”면서 “함께 손잡고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간다는 말도 없이 야속하게 떠나갔는데 마지막으로 손이라도 한번 따듯이 잡아보고 보냈으면 이다지 가슴 허비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임.

- 이날 김 제1위원장의 조문에는 황병서, 김기남, 최태복,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조연준이 동행하였으며, 앞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됐던 최룡해는 동행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음.
- 北 김정은, 금수산공전 참배로 새해 첫 활동(1/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일 “김정은 동지께서 2016년 1월1일 0시 금수산태양공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다”며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하고 경의를 표했으며 이어 영생홀을 둘러보았고, 이에 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동적위군 영예위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했다고 전함.
 - 또한 “참가자들이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석으로 강산이 변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격동의 날로 흘러보낸 자랑찬 2015년을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돌이켜 보면서 뜻깊은 2016년을 민족사에 특기할 자랑스러운 한해로 빛내이는 데 한몸 다바칠 불타는 맹세를 다졌다”고 덧붙임.
- 김정은 “북남대화 관계개선 노력”…신년사서 ‘핵’ 언급 자제(1/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일 낮 12시 30분(평양시간12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육성 연설을 방영하면서, 이에 김 제1위원장이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부질없는 체제대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총의가 집대성돼 있고 실천을 통해 그 정당성이 입증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우리는 올해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수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뿐만 아니라 오는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주문 하는데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우리는 주체혁명 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어야 한다”며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 당과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라고 제시함.

- 北 김정은, 과학기술전당 준공식 참석…새해 첫 공식활동(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당과 인민의 최고 령도자(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새해 주체105(2016)년 1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 테(이)프를 끊으셨다”고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당의 구상이 구현된 전민 학습의 대전당, 최신과학기술 보급거점”이라며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맞는 새해의 첫 문을 과학으로 열었다”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과학기술전당의 준공은 우리 당이 과학전선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준다”면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과학기술전당 운영을 잘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과학기술강국화, 인재강국화 실현에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날 준공식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 최태복 오수용 당비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김정은 외교 브레인’ 김양건 노동당 비서, 교통사고로 사망(12/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위원인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동지는 교통사고로 주체104(2015)년 12월29일 6시15분에 73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김양건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 비서의 중책을 지니고 우리 당의 자주적인 조국통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다”고 밝혔으며, 이어 “김양건 동지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과 겸손한 품성으로 하여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전함.
 - 그러면서 김 비서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 ‘견실한

혁명동지’, ‘우리 당과 인민의 훌륭한 아들’이라고 평가하였고,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높은 실력을 지니고 오랜 기간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김양건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큰 손실로 된다”고 강조함.

- 北 김양건 장례식, 국장으로 열려…최룡해는 불참(12/3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31일 김양건의 장례식이 열린 사실을 보도하면서 “장의식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가장 가까운 전우, 견실한 혁명동지인 김양건 동지를 잃은 비애에 휩싸여 있었다”고 전함.
 - 방송은 장례식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곽범기·오수용·김평해 당비서,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 당·정·군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밝히며, 지난 11월 초 지방으로 추방돼 혁명화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최룡해는 김양건 비서의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됐으나 이날 장례식에는 불참했다고 설명함.
- 北 최룡해, 김정은 새해 금수산궁전 참배에 불참한 듯(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16년에 즈음하여 1월1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셨다”고 보도함.
 - 신문은 “당과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함께했다”고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은 밝히지 않았으며, 신문에 게재된 참배 사진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맨 앞줄 양쪽에 황병서, 김기남, 최태복, 박영식, 리영길, 김원홍, 곽범기 등이 서 있는 가운데 최룡해의 모습은 보이지 않음.

다. 공식 행사

- 북한, 김정은 軍 최고사령관 추대 4주년 보고대회(12/2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북한이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4주년(12월30일)을 하루 앞둔

29일 중앙보고대회를 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했다고 보도함.

- 방송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보고에서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유일적 영군체제와 혁명적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본체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이며 최고사령관 동지(김정은)의 사상과 영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날 행사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해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리용무·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당·정·군 고위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방송은 전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지도부·매체, 김정은 신년사 실천결의 잇따라(1/2, 연합뉴스, 노동신문)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밝힌 이후 북한 지도부와 매체들의 지지 및 실천 결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함.
 - 김기남 노동당 선전담당 비서는 2일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신년사에 접한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갈 비상한 열의와 불타는 각오에 넘쳐 있다”고 강조함.
 - 박태성 평안남도 책임비서는 노동신문의 다른 기고문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의 애국심을 더욱 키워주고 잘 보살피주며 이끌어줘 그들이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 기적의 창조자, 청년 영웅이 되게 하겠다”며 신년사 관철 의지를 다짐.
 - 김영철 전력공업성 부상은 “신년사에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는 뜻깊은 올해 경제강국 건설의 돌파구를 여는데서 전력문제를 제일 선참으로 강조했다”며 “나라의 전력문제를 책임진 일꾼의 한사람으로서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다”고 말함.

- 北 각계, 김정은 신년사 실천 결의...총성 경쟁 나서나(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 불멸의 기치...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이란 글을 통해 내각·과학·교육·청년·농업 분야 관계자들의 실천 결의 내용을 보도함.
 - 로두철 내각부총리는 이날 '경제작전과 지휘에서 결정적인 전환을'이란 기고문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자강력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갈 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말씀 사상을 뼈에 쫓아 박고 한 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려질 각오로 경제작전과 지휘에서 새로운 혁신을 가져 오겠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함.
 - 장철 국가과학원장, 리국철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또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직총 중앙위) 간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대학생 등이 김 제1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실천 결의와 찬양을 이어감.

-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28, 중앙방송)
- 軍 제3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 12월 28일 김정은이 참가한 가운데 당 중앙위 회의실에서 진행(12.2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4돌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 12월 28일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보고)등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12.28, 중앙통신)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12월 29일 주영길(직총위원장, 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성문화회관에서 진행
- '올해에 우리(北)가 미제의 가증되는 핵전쟁 도발책동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할 수 있는 것은 자위적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 막강한 군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조선의 힘은 김정은'이라고 주장(12.29, 중앙통신·노동신문)
- 박봉주(내각총리),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 현지 요해(12.29, 중앙통신)
- 인민군 제3차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 12월 29일 황병서(연 설)·박영식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목란관에서 진행(12.29, 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데 이바지한" 홍성철(육해운성 국장) 등에게 '감사' 전달(12.30, 중앙방송)
- '올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해방 70돌과 당 창건 70돌을 승리자의 대축전, 일심단결의 대축전으로 빛내었다'며 '원수님의 위인적 품모에 매혹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이 강화되고 그 견인력과 생활력이 더욱 높이 발휘된 뜻깊은 해'라고 주장(12.31, 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1월 1일 0시 축포발사(평양 김일성광장 앞 대동강반) 실행중계 예고(12.31, 중앙방송·평양방송)

- 北방송, 2016년 새해를 맞으며 ‘김정은 동지께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 담아 새해 인사를 드린다’며 ‘안녕’ 축원(1.1, 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조치

- ‘北 혁명성지’ 삼지연군 확 달라졌다…리모델링에 공장신축(12/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량강도 삼지연군이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모습을 일신했으며 준공식이 28일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준공식에는 김용진 내각 부총리, 리상원 량강도 당위원회 책임 비서, 리성국 량강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은 삼지연학생소년궁전, 삼지연군문화회관, 삼지연혁명전적지답사 숙영소 숙영각들(숙소들), 백두산지구 체육촌, 배개봉국수집 등으로 알려졌고 군 경기장과 피복 공장, 버섯 공장도 삼지연군에 새로 들어섬.
- 북한 방송 “올해 10만정보에 수억그루 나무 심어”(12/3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1일 “전국 각지 일꾼과 근로자들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할 데 대한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지난 한 해 동안 즐기찬 투쟁을 벌여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며 “애국적 헌신성에 의해 전국적으로 10여만 정보에 수억 그루 나무를 심었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이어 “평양시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나무모 생산계획을 100%로 넘쳐 수행했다”면서 “평안남도 평원군, 평안북도 태천군, 함경남도 단천시, 남포시 천리마구역에서도 수많은 나무모를 생산했다”고 전함.

다. 경제 상황

- 北대학생, 빵이 든 주머니 들고 장마당 가는 이유(12/29, 데일리NK)
 - 데일리NK는 29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요즘 장마당에서는 헤산농림대학 마크(배지)를 단 대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식빵이 든 주머니가 들고 있다”면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방학을 맞아 집에 갈 때 이용할 기차나 서비차 비용을 마련하려고 빵을 팔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평상시 학생들은 대학에서 매일 공급받는 빵을 먹거나 장마당에서 담배로 바꿔 먹기도 했는데, 방학을 앞둔 최근에는 대부분 배급된 빵을 팔고 있다”면서 “장마당에서 일반 주민에게 개당 천원에 팔리는 빵은 넘겨주면 800원을 받는데 한 달 분량을 팔면 2만 5천원을 모을 수 있다”고 덧붙임.
 -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 빵은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식사대용으로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일부 장사꾼들은 장마당 입구에서 대학생들을 보면 다짜고짜 매대로 데리고 가 싼 가격에 넘겨받기도 한다”면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배급된 빵을 먹지 않고 장마당에 내다 팔아, 불펜, 노트 학용품들 비롯해 생필품 등을 구입하는 현실이라고 전함.

- 북한 택시는 특권층 전유물(12/29,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의 택시가 일부 간부들과 부자들만을 위한 고급 운송수단이 되어, 택시사업소에 바쳐야 하는 월임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운전수(운전기사)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돈 많은 손님만 골라 태우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이어서 “택시운전수들은 매월 150달러의 지정금액을 사업소에 바쳐야 하는데 주행거리 1km당 요금은 중국 인민폐 3원으로 매우 비싼 편이지만 간부들과 장사꾼들은 왕복거리 40위안정도를 부담 없이 이용하고 있어 택시 운전수의 돈벌이가 꽤찮은 편”이라고 전했으며, 최근에는 택시운전을 원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어 택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승용차를 구입해 사업소에 등록하는데 대개 중국산승용차의 매입가격은 5만 위안 정도라고 지적함.
 - 이와 관련 라선시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간부들과 장사꾼들은 장거리를 운행할 때 시끄러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는데 대부분의 택시운전수들이 단속초소에 정기적으로 뇌물을 고이고 있어 초소를 무사통과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라선시를 오가는 길목에 있는 보위부10호초소 ‘후창초소’는 일반 주민들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이지만 유독 택시들은 무사통과 시켜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고 전함.

라. 대외 경제 관계

- “중 지린성, 북중경제합작구 신설”(12/28, 길림일보,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과 국경을 접한 압록강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지린성이 자강도 만포시와 마주한 지안에 북중경제합작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28일 길림일보를 인용하여 보도함.
 - 방송은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통관시설과 물류창고, 가공공장 등을 갖춘 3.57 km² 규모의 북중경제합작구가 지안시에 들어서게 되며, 지린성은 새 합작구 건설에 앞으로 5년 동안 100억 위안 (약15억 달러)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 또한 방송은 지린성이 합작구 건설과 함께 지안에서 평양을 잇는 고속철 건설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창춘-통화-지안-평양을 잇는 약 800km 구간에 고속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린성이 추정된 총 사업비는 415억 위안 (약63억 달러)으로 고속철과 함께 고속도로 신설도 추진된다고 밝힘.

- 국제사회 올해 대북 지원 4천 270만 달러...대부분 영양 지원(12/30,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식량계획(WFP)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15년 한 해 유엔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천 270만 달러 (\$42,739,838)로 집계됐다고 30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5천 100만 달러보다 17% 줄어든 것이며,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원조국들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3천 100만 달러로 집계했다고 전함.
 - 방송은 2015년 한 해동안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호주 등 14개국이며,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950만 달러를 지원한 스위스이고 두 번째는 900만 달러를 지원한 러시아라고 밝힘.

- 캐나다 구호단체, 北에 영양소가루 180만포 지원(12/31,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캐나다 민간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어린이를 위해 미량영양소 가루 180만 포를 지원했다고 31일 보도함.
 - 방송은 수전 리치 퍼스트 스텝스 대표가 “지난 12월26일 180만포의 미량영양소를 북한에 보냈다”며 “(이를 포함해) 올해 메주콩 200t과 스프링클스 480만포 등 총 60만 캐나다 달러(5억여원) 상당을 지원했다”고 밝힘.
 - 또한 방송은 스프링클스라는 이름의 이 가루가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 등 성분이 함유돼 영유아 성장을 촉진하거나 임산부의 빈혈과 영양 결핍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지원된 가루는 평안남도과 강원도내 진료소를 통해 어린이에게 제공된다고 설명함.

- 북한 신의주 관광단지 개장...중국인 무비자 방문(12/29, 중국신문망,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는 29일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을 인용하여 신의주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 관광단지가 문을 열었다고 보도함.
 - 중국신문망은 신의주압록강 관광단지로 명명된 새 관광단지가 지난 20일 개장 행사를 가졌고 이에 북한과 중국 관광업계 등에서 300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신의주압록강 관광단지는 13만 제곱미터 부지 위에 식당, 면세점, 공연장, 부두 등이 조성되어 있다고 설명함.
 - 매체는 또한 ‘중국신문망’은 중국인들이 랴오닝성 단둥에서 배를 타고 이 관광단지로 갈 수 있으며, 당일 관광의 경우 입국사증 없이도 국경지대에서 북한 세관이 발급해 준 허가증으로 통과할 수 있다고 전함.

- 개성시, 8개의 양어 못을 건설하며 새 양어장건설 1단계 공사 완료(12.28, 중앙방송)
- 2015년 과수부문 사회주의 생산경쟁 총화 모임, 12월 29일 곽범기(당 비서)·리철만(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2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책공업종합대학 혁명사적관 개관식, 12월 29일 현지에서 진행(12.29, 중앙통신)
- ‘사회주의 증산경쟁(黨 제7차 대회를 전례없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을 전국 공장과 기업소들에 선포하는 모임, 12월 30일 김중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 문화회관에서 주영길(「직총」위원장 보고) 등 참가하 진행(12.30, 중앙통신)
- 강계 고려약 가공공장에 3중3대혁명붉은기 수여식, 12월 29일 김재룡(자강도 黨 책임 비서) 등 참가하 진행(12.30, 중앙방송)

- 농업성 부상(리재현 등)·「여맹」부위원장(김명숙 등) 등, 김정은이 ‘2016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과업(알곡생산 계획 반드시 수행 등) 관철 결의’ 반향(1.2, 중앙방송)
- 전력·철도 수송·금속·석탄공업 및 농·축산과 경공업 등 각 부문 근로자들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 결의(1.2, 중앙통신)
-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일꾼-노동자들의 새해 첫날 ‘철강 재·전력생산 계획 성과적 수행’도 선전(1.2, 중앙방송)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일꾼-노동계급, 1월 2일(오후 2시) ‘50만산 대발파 성과적’ 수행(1.2,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북한, 새해 첫날 ‘0시 불꽃놀이’ 오후 9시로 연기(12/3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015년 12월 31일 오후 11시 55분께 자막을 통해 “2016년 새해에 즈음하여 1월 1일 21시부터 김일성광장앞 대동강변에서 축포발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알림으로써, 원래 1월 1일 0시에 열기로 했던 새해 첫날 불꽃놀이 행사를 연기한다고 보도함.
 - 이로써 북한은 새해 첫날 0시에 열려고 했던 불꽃놀이 행사를 갑자기 21시간이나 늦췄으나, 방송은 이러한 연기 사실을 자막으로만 알렸을 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북 국경통제 강화로 주민 원성 높아(12/3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북-중 국경연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온 북한이 전례 없이 강력한 국경통제방안으로 처벌규정과 함께 철조망 공사에 당 자금까지 투입하고 있어 연선작업(국경지역의 불법활동)으로 살아가던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최근 강연회를 통해 불법월경과 밀수를 근절할 데 대한 김정은 제1위 원장의 새로운 지시가 내렸다”고 전하면서, “강연회에서 발표 된 국경통제의 첫 번째 조치는 불법통화에 대한 처벌”이라며 “내용에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든 불법통화가 확인되면 1분당 1년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이어서 연설통제의 둘째는 신속한 신고체계라며 “돈벌이를 위해 탈북 방조에 나선 브로커가 돈을 받은 즉시 신고하면 돈을 몰수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약속까지 내놓으며 국경연선에서의 적극적인 신고체계를 조장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중국과 인접한 국경연선에 ‘철조망’ 공사가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 새로 완공된 철책선은 김정은이 당자금을 풀어 중국에서 사들인 철조망으로 완성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당자금을 풀어 국경을 봉쇄한 것은 주민들의 숨통을 막는 행위라고 질타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北어민·군 외화벌이 어업에 혈안…무리한 조업에 조난 많아”(12/28, 아사히신문)
 - 아사히신문은 북한에서 1995년 이후 개인이 자비로 목조선을 마련해 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에 배를 등록하고 외화를 벌기 위해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국에 사는 한 탈북 남성을 인용해 28일 보도함.
 - 이 남성은 좀처럼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 군에 배를 등록해 어업을 하는 것이 인기가 있다고 전하면서, 군이 어업을 하는 이들에게 상납금을 요구하며 많게는 연간 약 50만 달러(약 5억 8천 475만원)까지 목표가 설정된 배도 있다고 밝힘.
 - 뉴스는 청진이 중국과 가까워 외화벌이하기 쉬운 까닭에 이곳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목조선은 약 2천척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7할이 군에 등록된 배로 알려졌다고 밝히며, 어민들은 출항 전에 라디오로 조선중앙방송 등의 일기예보를 들을 뿐 배에 라디오나 무선통신 설비가 없어 날씨가 급변할 때 조난당하기 쉽다고 지적함.

- 북한도 미세먼지 피해 심해(12/30,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0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며칠 동안씩 ‘황사’가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 올해 들어 더욱 심해졌다”며 “2천년대 초까지는 일기예보 시간에 ‘황사’ 경보를 전했는데 지금은 웬일인지 관련 정보를 아예 알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 방송은 북한이 워낙 어느 지역이나 흙먼지가 많아 여태껏 주민들은 ‘황사’ 현상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지만, 올해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외부정보 유입과 의사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황사’가 끼는 날이면 마스크를 쓰는 어린이나 여성들이 늘고 있어 장마당에서도 중국산 ‘황사’ 마스크가 잘 팔리고 있다고 설명함.
 - 소식통은 이런 ‘황사’는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많이 발생한다며 “가정들에서 빨감으로 사용하거나 공장기업소 등에서 연료로 쓰이는 석탄으로 인해 ‘황사’(미세먼지)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고 우려함.

- “北 동해서 무리한 조업으로 실종 어민만 150명 넘어”(12/31, 데일리NK)
 - 데일리NK는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한 어민들의 고기잡이를 연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동해안에서 무리한 조업으로 실종된 주민만 150여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업만 독려하고 있어 실종 주민이 늘고 있다고 31일 보도함.
 - 이에 소식통은 “올해 6월부터 시작된 낙지(오징어)철과 11,12월 도루묵 철 사고분석에 따르면 실종자 대다수가 작은 목선(8~12마력 어선)승선자들이었다”면서 “침몰된 선박 대다수가 전문 선박공장에서 건조한 것이 아닌 개인 목수들이 어설프게 제작한 자그마한 전마선(傳馬船)들이었다”고 덧붙임.
 - 또한 소식통은 북한 동해 지역 주민들은 마땅한 벌이가 없기 때문에 6~10월의 낙지(오징어)철과 11~12월 도루묵철이 되면 ‘물고기가 내 가족 먹여 살린다’며 물고기 잡이에 나섰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작은 목선을 타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풍랑과 잦은 엔진고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함.

- 북한 새해맞이 음식…떡국부터 메기탕까지(12/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수도의 급양봉사기지(대형식당)들에서 희망찬 새해를 맞는

인민을 위한 명절봉사 준비로 흥성이고 있다”며 “내부와 외부를 보다 환하게 꾸려 명절 분위기를 돋구었으며 음식품평회와 시식회도 여러차례 진행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먼저 ‘인민의 전통적인 설음식’인 떡국을 비롯해 옥류관·청류관·평양면옥의 꿩고기국수, 경흥관·동천호식당의 노루불고기, 금성거리온반집·약산식당·칠성각의 평양 온반과 타조불고기를 대표적인 명절 음식으로 소개했으며, 이어 “양력설 명절에 특색있는 음식 봉사는 옥류관 요리전문식당에서 준비하는 보가지(복어)탕”이라며 “더 잘 만들어 봉사하기 위해 양력설명절을 앞두고 여러차례 시식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함.

■ 북, TV로 영화문헌학습 실시(12/3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1일 소식통을 인용하여 “중양에서 영화문헌학습을 개인집에 모여 텔레비존을 통해 실시하도록 지시했다”며 “11월부터 지역회관이나 영화관 대신 인민반별로 개인집에 모여 진행된다”고 보도함.
- 소식통은 지난시기 영화문헌학습은 대개 “5~6백명의 주민들이 모여 동단위로 진행되었다”며 학습일에는 조직별 인원장악이 엄격해 출석률은 높은 반면 공공장소의 잦은 정전으로 촛불을 켜고 진행하면서 학습시간은 주민들의 취침시간이 되어왔다고 설명했으며, “예전에는 조직별 통제 요원이 감시하고 있어 참여도가 높았지만 새로 도입된 학습방법은 한동네 주민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서로 사정을 봐주고 있어 학습에 빠진 인원이 많아도 전원이 참가한 것으로 보고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임.

■ 북 서민도 명절 준비로 바빠(12/31, 자유아시아방송)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1일 소식통이 “지난 해 농사가 잘 돼 식량가격은 많이 내렸지만 과일이나 돼지고기 값은 더 올랐다”며 “‘때대끼(하루벌이)’로 버티는 집들에서도 떡방아를 찧는 소리가 들려 새해가 다가왔음이 실감 난다”고 전해왔음을 보도함.
- 소식통은 당국이 설 명절을 맞으며 군인들에게 공급한 물고기가 장마당에 대량으로 흘러들면서 비록 일시적이지만 장마당 해산물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값이 내렸다고 전하면서, 도리어 북한의 전기사정은 예년보다 더 못하다고 지적함.

- 이와 관련한 또다른 소식통도 “3일간의 명절휴식을 주었지만 새해 첫 아침엔 김일성, 김정일 동상 조문행사와 ‘신년사’ 청취가 의무적”이라며 “새해 ‘첫전투’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휴식은 1월 2일 하루뿐”이라고 밝힘.
- 북한지역도 ‘겨울실종’…연초 평양 최고기온 9.2도(1/2,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2일 오후 “오늘 대부분 지방에서 낮 제일 높은 기온이 5~12도로 날씨가 매우 푸근했다”고 보도함.
 - 그러면서 “특히 평양 9.2도, 신의주 6.1도, 평성 6.9도, 남포 9.3도, 사리원 11도, 해주 10도, 강계 5.1도, 함흥 11.2도, 원산 12.1도로 당일 제일 높은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전함.
- 북매체 “새해 맞아 음식점·놀이공원 등에 주민 몰려”(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주체105(2016)년이 시작된 이 땅에 기쁨과 환희, 희열과 낭만이 넘쳐났다”며 “평양을 비롯한 온 나라 거리와 마을에 명절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의 물결이 흘렀다”고 전함.
 - 통신은 “다채로운 명절 맛이 풍경, 흥성이는 분위기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면서 동평양대극장, 모란봉극장, 평양교예극장, 함흥대극장을 비롯한 극장과 문화회관에서 경축공연이 열렸다”고 설명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 32년만에 미얀마서 활동재개키로(1/3, dpa통신)
 - 3일 dpa 통신에 따르면 김석철 주미얀마 북한대사는 지난 2일 미얀마언론협회와 만나 조선중앙통신이 미얀마에서 활동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이 협회의 티하 소우 사무총장이 전함.

- 北 역기협회, 2015년 최우수 男女 선수들 선정(12.31, 중앙통신)
- 왕재산예술단 청봉악단 신년경축 음악회, 1월 1일부터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및 평양의 각계층 근로자들 관람(1.2, 중앙통신·중앙방송)
- 인민군 제3차 수신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 국가선물관 문수물놀이장·미림승마 구락부·농리인민유원지 방문(1.2,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특이사항 없음.

나. 미·북 관계

- 트럼프·루비오 “북한의 미치광이 다루겠다.” 거듭 발언(12/31,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 모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묘사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될 경우 강경한 대북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음.
 - 트럼프 후보는 30일(현지시간) 오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휴양지인 힐튼헤드에서 열린 대선유세에서 “이슬람 국가(IS)가 큰 문제이고 러시아가 문제이고 중국이 문제다.”며 “그런데 북한의 미치광이(maniac)도 문제다. 그는 실제로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 한편, 루비오 후보는 이날 TV광고에 출연해 “오늘날 우리는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있다.”며 “급진적인 이슬람 테러와 북한의 미치광이(lunatic), 모스크바의 강패, 이스라엘 총리보다 이란의 아야톨라(이란의 정신적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지칭)를 더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밝혔다.
 - 두 후보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공격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트럼프 후보는 지난 9월1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린 미국 공화당 대선경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누구도 미치광이가 앉아서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루비오 후보도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있는 바로 이곳(캘리포니아를 의미)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가 북한에 있다.”고 말했었음.
- “美, 2·29 합의직후 남북 6자 수석회담 종료”…북한이 거부(1/2,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012년 북한과 미국 간 ‘2·29’ 합의 직후 ‘뉴욕채널’(북·미 간 비공식 협의창구)을 통해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적극적으로

- 중용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에 따르면, 뉴욕 채널의 미국 측 담당자인 클리포드 하트 6자회담 특사는 2·29 합의 직후인 3월4일 북측 카운터파트인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리용호 외무성 부상의 방미를 위한 비자 발급을 승인한다는 미국 국무부의 결정을 통보하면서 “이것은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합의(2·29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워싱턴이 앞으로 관계 진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트 특사는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현 외교부 제1차관)이 해당 콘퍼런스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리 부상이 임 본부장과 회동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으며, “리 부상이 임 본부장과 만나는 것은 리 부상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의 회담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차석대사는 “즉각 평양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 그러나 이후 리 부상은 뉴욕의 ‘트랙 2’ 콘퍼런스에 참석했으나, 임 본부장과의 별도 회동에 응하지 않았다. 리 부상은 임 본부장과의 회동 문제에 대해 외무성 본부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시 북한 수뇌부가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짓는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중·북 관계

- 中, 北 김양건 사망에 조의 표명…동지로 호칭(12/30, 연합뉴스)
 -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는 김양건 동지의 불행한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며 “그의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 루 대변인은 “김양건 동지는 중조(북중) 관계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힘써왔고 특별히 중조 양당의 고위층 교류·왕래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루 대변인은 애도 메시지를 표명하면서 김 비서를 ‘동지’로 수차례 호칭했다.
 - 중국이 김 비서를 동지로 칭하며 애도 메시지를 발표한 것으로 미뤄 최근 모란봉악단의 공연 취소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양국관계 개선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가. 한·미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핫라인’ 5년 만에 결실…KADIZ 우발충돌 예방 효과(12/31, 연합뉴스)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1일 한·중 국방부 간에 설치된 핫라인으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과 처음으로 통화했으며, 이날 핫라인 연결은 한·중 군사교류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적인 통화였다고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강조했다.
 - 한 장관은 통화에서 “이번에 설치한 전화는 양국 국방 당국 간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이룬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안보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 잘 활용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중 국방부간 핫라인은 단순한 국제전화 수준을 넘어 양국 간 전략적인 소통을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이번에 개통된 핫라인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일부 구간에서 항공기끼리의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는 채널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여기에다 북한의 급변사태 및 우발사태 때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음.

- 국방부는 “이번 직통전화 개설은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내 다양한 안보상황에서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음.
- 한·중 FTA 2차 관세인하…11일 만에 관세 두 단계 내려(1/2,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달 20일 발효된 이후 올해 1일을 기해 김치를 비롯해 2차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졌다고 중국 언론이 2일 전했다.
 -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발효일(2015년 12월 20일)과 올해 1월 1일간 11일 사이에 2단계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게 된 것임.
 - 양국은 한·중 FTA 발효와 함께 한국은 품목수 기준 50%, 수입액 기준 52%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앴고, 중국은 품목수 기준 20%, 수입액 기준 44%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적용했으며, 아울러 품목별로 5년, 10년, 15년, 20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연한에 따라 각각 20%, 10%, 6.7%, 5%씩 낮췄음.

다. 한·일 관계

- 야스쿠니 용의자 기소…“한때 ‘압력솔폭탄 생각했다.’ 진술”(12/28, 연합뉴스)
 - 일본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구속)가 재판에 회부됐음. 일본 도쿄지검은 28일 전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일본 검찰은 일단 참배 등의 타당한 사유 없이 야스쿠니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적용했지만, 본안 격인 폭발음 사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벌여 추가기소할 가능성도 보임.
 - 아사히 신문은 전씨는 일본에 다시 입국했다가 체포됐을 당시 ‘압력솔 폭탄을 만들려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28일 보도했음. 일본 경찰은 이 진술에 따라 지난 24~25일 야스쿠니 화장실에서 발견된 모래 형태의 물질을 파이프에 넣은 뒤 불을 붙이는 실험을 한 결과 격렬한 소리와 함께 연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물질을 ‘화약류’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전씨에 대해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위안부 타결> 한·일 외교수장, 회담 70분 만에 결론(12/28, 연합뉴스)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주앉은 한·일 외교장관은 회담 개시 70분 만에 결론을 도출했음. 한·일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타결 지은 뒤 오후 3시 30분께 외교부 청사 3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음.
 -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전하고, 한국 정부가 위안부 지원 재단을 설립하면 정부 예산으로 약 10억 엔을 출연하겠다고 덧붙였다.
 - 같은 시각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적·법적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기금 마련 정도로 봉합하려는 아베 정권의 태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기시다 日외무상 “소녀상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안다.”(12/28, 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음. 기시다는 28일 윤병세 외교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타결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음.
 - 기시다는 또 한·일 간의 합의 사항인 재단 설립 방안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더불어 “한·일 간의 재산 청구권에 대한 법적 입장(배상 문제는 최종 종결됐다는 것)은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말했음.
 - 이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10억 엔(약 97억 원)을 출자하기로 한 것이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됨.
 - 기시다는 “이번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중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평가한 뒤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성과”라고 말했음. 기시다는 이어 한국이 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 <위안부 타결> ‘성노예’ 부정하던 아베 결단이유…“미국·국제여론·지지율”(12/28,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역사적인 군위안부 합의를 결단한 배경에는 미국의 요구와 안정된 정권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 우선 그는 국제사회에서 자신이 군위안부 부정론자로 비난받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역사인식 문제가 한·일 관계의 장애물이 되면서 한·미·일 3자 공조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종식하려는 미국의 꾸준한 해결 요구도 무시할 수 없었음.
 - 작년 4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매우 지독한 인권침해 문제”라고 말한 것은 아베에게도 강한 메시지가 됐던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집단 자위권 법 강행 처리(9월 19일)로 인해 떨어졌던 내각 지지율이 11월 이후 다시 50%에 육박할 정도로 회복된 것도 아베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아베의 결단에 쐐기를 박은 것은 이달 한국 사법부의 두 결정이었음. 지난 17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무죄 판결과 23일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 판단을 회피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베 총리의 결단에 박차를 가한 격이 됐음.

- 日아베정권은 왜 소녀상 철거에 집착하나(12/28,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일 간 협상에서 군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철거에 강하게 집착하는 배경은 결국 자신들이 부정하려는 역사를 상징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일본 집권 자민당의 한 중진은 올 초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군위안부 소녀상을 “이상한 인형”이라고 부르며 격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으며, 이런 반응에는 국가를 상징하는 주한일본대사관을 노려보는 듯 한 소녀상의 존재에 대한 감정적인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게 소식통들은 전언임.
 - 소녀상이 주는 이미지는 10대 소녀가 자기 의사에 반(反)해 일본 군인들의 성노예가 됐다는 극심한 인권유린임. 그것이 한국 국내를 넘어 미국 등 해외로 확산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외치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해외 홍보에 공을 들여도 그 소녀상이 주는 상징성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철거 및 추가 설치 중단에 집착해온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음.

- <위안부 타결> 韓·日 '성과' 공감·법적배상 책임·소녀상은 '온도차'(12/28,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이 28일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이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교착상태를 거듭했던 한·일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됨.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합의를 '극적인 성과'로 평가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위안부 출연금의 성격, 소녀상 이전 문제 등을 놓고는 미묘한 온도차도 감지되고 있음.
 - 먼저 일본 정부의 책임 부문이 주목됨. 기시다 외상은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합의 사항 중 군위안부 지원기금 설립 및 일본 정부의 출자에 대해 “배상은 아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음.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부분에서도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등을 명시하지 않은데다, 일본 정부의 출자금에 대해서도 '법적' 배상이 아니라 '선의의' 보상으로 읽혀질 수 있어 보임.
 - 소녀상 문제의 경우도 한·일 간의 인식차가 여전히 보임. 윤병세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기시다 외무상은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음. 일본 측은 유네스코에서 대표단 발언을 통해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노역을 당했다.”고 밝혔지만, 기시다 외무상은 일본 기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음.
- <위안부 타결> 日총리 사죄·정부책임 언급·아시아여성기금보다 진전(12/28, 연합뉴스)
 - 한·일이 28일 합의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은 일본 측이 20년 전에 같은 목적으로 설립했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에 비해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됨.
 - 무엇보다 아시아여성기금이 정부의 책임을 배제하고 민간 차원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이번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타결안은 정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큰 차이.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책임과 사과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위로금 등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지속적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한 것이 이런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가능함.
 - 실제 아베 일본 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일본국 내각총리 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히는 등 '사죄'의 뜻을 표했음.

- <위안부 타결> 앞선 사죄와 비교하면…‘국가책임’ 인정·‘강제성’ 누락(12/28, 연합뉴스)
 -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는 일본 총리가 사죄한다는 뜻을 강조해 아베 내각의 역대 의견 표명 가운데서는 가장 진보했으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규정 등은 앞선 고노담화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옴.
 - 28일 사죄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요구한 것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표현만 본다면 고노담화의 도의적인 책임보다는 한걸음 나아간 셈임.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은 끝났다고 하고 있으나 기시다 외무상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국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옴.
 - 그러나 28일 사죄에 포함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설명은 고노담화에 훨씬 못 미침.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반인도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군뿐만 아니라 정부 측의 관여 사실도 명시했으나, 이에 비해 28일 사죄에서는 상당히 간략하게 표현했을 뿐임. 이런 점에 비춰본다면 일본 정부의 이번 사죄 표명은 사실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고노담화에 필적하기 어려움.
 - 28일 발표문을 아베 총리가 그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드러낸 인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는 2012년 8월에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야자와(宮澤) 담화와 고노 담화,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 모든 담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은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거듭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왔다.”며 과거형으로 마지 못해 사죄를 언급했음.

- “한·일 관계 발전·교류증가”…日정·재계도 위안부 타결 환영(12/29, 연합뉴스)
 - 일본 정치권과 재계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차원의 해법 도출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음. 정치권은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을 바탕으로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했고, 재계는 양국 간 상호 의존성이 높은 분야가 많은 만큼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음.
 - 집권 자민당의 이나다 도모미 정조회장은 29일 현지 언론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으며, 민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차기 내각’ 외무상도 “솔직히 환영한다. (양국 관계가) 후퇴하지 않도록 건설적 대화를 거듭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호평했음.

- 경제계에서도 환영의 목소리 일색이었음. 대표적 경영자단체인 게이단련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회장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외교관계 개선을 당부했었음.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 개선이 급하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한 것 아니겠느냐”고 경제적 차원의 분석을 내놨음.
- **독도·수산물수입·징용소송·협상타결에도 韓日 현안 산적(12/29, 연합뉴스)**
 - 한·일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지만 양국 간 첨예한 현안은 아직도 산적해 있음. 무엇보다 해결되기 어려운 것은 독도 문제이며, 여기에 일본에 의한 강제징용 관련 소송,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 등도 난제임.
 - 일본은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까지 붙이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논리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까지 추진하고 있음.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2005년 3월에는 ‘다케시마의 날’까지 지정하는 등 독도 야욕은 중앙 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로도 확산돼 있는 상태임.
 - 일제시대 강제동원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문제도 현안 중 하나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00년 전후부터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한국 법원에 잇따라 제기했음. 일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이를 주시하고 있음.
 - 일본 측은 지난 8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의 수입금지는 WTO 협정 위반”이라며 분쟁 조정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자진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 이 밖에 한·일 관계가 개선 무드로 가는 만큼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일본 각료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 양국 간의 갈등 요인은 곳곳에 산재해 있음.
- **<위안부 타결> 반기문 “한·일 관계 더욱 개선되길 희망”(12/29,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 타결한데 대해 “이번 합의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반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같이 밝히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환영…이행이 중요”(12/29,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 타결한 데 대해 공식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했음. 미국 외교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존 케리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참모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민감한 과거사 이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음.
 - 케리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양국은 이번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이번 합의가 (희생자들의) 치유를 촉진하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음.
 - 라이스 보좌관도 “미국은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용기와 비전을 갖고 이처럼 어려운 사안에 대한 지속적 해결책을 마련한데 대해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밝혔음.
 - 케리 장관과 라이스 보좌관은 한·일 양국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낸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가 되려면 실질적인 합의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됨.

- 위안부 합의로 디아베 ‘韓·中 밀월’ 견제…‘안보협력’ 강조 주목(12/29, 연합뉴스)
 - 28일 한국과 일본 간의 군위안부 합의 도출로 일본은 한·중 간의 ‘밀월’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다만 역사인식 문제로 갈등하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그 와중에 일본은 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면 자연스럽게 한국은 따라올 것이라는 인식 아래 소극적인 대 한국 외교를 펴왔음.
 - 아베 총리가 군위안부 합의를 결단하며 한·일 관계개선에 교두보를 마련한데는 한·미·일 공조 복원을 통한 중국 견제 의중이 내포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안보협력을 강조한 아베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합의 타결 후 발언에서 이런 의중을 엿볼 수 있음.
 - 올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한국 해군의 자위대 관함식 참가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한·일 간 방위 협력에 한층 속도를 내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구상인 것으로 보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활동폭을 대폭 넓힌 개정 안보법이 내년 3월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일본은 자위대와 한국 해군의 합동

훈련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음.

- NHK “국제회의 때 韓日정상대화 추진”…내년 3월말 워싱턴 가능성(12/29,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합의의 여세를 몰아 향후 국제회의 등 계기에 한·일 정상 간 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NHK가 29일 보도했음.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최대 현안이던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해결에 양국이 합의한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NHK는 전했다.
 - 이에 따라 내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유력하게 부상할 전망이다, 이 회의는 2016년 중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나란히 참석하는 첫 국제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핵안보정상회의가 미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일 정상회담 뿐 아니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도 점쳐지며, 또 일본이 내년에 의장을 맡는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에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상 상호방문·탄약제공 협정’…日, 한·일 협력확대 기대감(12/30, 연합뉴스)
 - 한국·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양국의 협력 강화에 관한 기대 섞인 보도가 일본에서 이어지고 있음.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30일 전했다.
 -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선 접촉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으며, 내년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 기회를 활용해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상호 방문 부활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음.

- 유엔 특사 “한·일 위안부 합의 획기적…조기 이행해야”(1/1, 연합뉴스)
 - 유엔의 분쟁지 성폭력 문제 책임자가 한·일 간의 군위안부 합의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고 조기 이행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음.

- 분쟁지역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자이나브 하와 반구라 유엔 사무총장 특사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합의를 환영했음. 반구라 특사는 한·일 양국이 “(합의에 근거해) 양국 관계를 전진시키는 공통의 목적과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그러면서 양국이 세계 각 분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을 근절하는데 지도력을 발휘해주도록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일한의원연맹, 위안부 피해자 만남 추진…한·일 합의 이해 모색”(1/3, 연합뉴스)
 -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한국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만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은 늦어도 올해 5월 일본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회담 여건을 조성하려고 이런 구상을 서둘러 검토하고 있다고 일한의원연맹 관계자가 밝혔음.
 - 이들은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회담에서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피해자가 반발하는 것을 고려해 일본 정치인이 직접 설명해 이해를 구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일한의원연맹의 방문이 양국 관계 등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는지를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관측했음.
- 교도 “한·일 위안부문제 합의 후속조치 국장급 논의키로”(1/3,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안 이행 절차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3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중에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양국 국장급 협회가 다시 열리면 한국 정부가 설립할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98억 원)을 내놓는 것에 관한 절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로켓군·항공모함 통합사령부...中, 美군사력 추격 공개선언(1/2, 연합뉴스)
 - 중국 지도부는 신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군사력 강화 조치를 지난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잇달아 발표하며 2016년을 전면적인 '군사굴기'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
 - 시 주석은 '로켓군'에 대해 '진 지역·선제적 전쟁'을 거론하며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핵억지력과 핵반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거리-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국 국방부는 전날 오후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로켓군 창설이 핵전략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음.
 - 군사전문가 쑹중평(宋忠平)은 최근 홍콩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중앙군 사위가 총체적인 지휘·명령을 내리고 전구 사령부가 작전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런 중국군의 지휘계통 일원화와 체제 개편에 따른 군 수뇌부 물갈이는 결국 군의 최고 정점에 있는 시 주석의 권력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해석도 냈음. '전략지원 부대'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
 - 또한, 중국은 러시아 등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관계를 거듭 격상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작은 파문들을 일으키고 있음. 양국의 군사적 경쟁은 이미 남중국해 인공섬 충돌을 계기로 이미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임.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간 패권 대결이 이처럼 군사 분야로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전략적 이익을 둘러싼 양국의 충돌 수준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함.
- 中, 남중국해 인공섬서 시험비행...美·베트남·필리핀 빈발(1/3, 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 해역에 만든 인공섬에서 시험 비행을 하자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물론 미국도 반발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이 지역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음.
 - 3일 베트남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전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의 피어리 크로스 암초(중국명 용수자오)를 매립, 확장한 인공섬에서 항공기를 시험 운항했음.

-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시험 비행이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국가들이 분쟁해역 매립, 건설, 군사 시설화를 중단할 것으로 촉구해왔음.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인공섬의 비행장 시설이 민간항공 기준을 충족하는지 민항기를 시험 운행했다고 확인하며 이는 중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으며,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난사군도와 주변 해역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바. 미·일 관계

- “日 ‘군위안부 타결 대비 성명 준비해 달라’ 美에 요청”(12/28,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군위안부 문제 타결 시에 대비, 환영 성명 발표 준비를 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음.
 - 신문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타결안이 도출될 경우 그것이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는 점을 확인할 제3자를 개입시키는 차원에서 미국에 성명 발표를 요청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사. 미·러 관계

- 미국 “러시아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 급증 우려스러워”(12/30,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명분으로 시리아에서 공습을 개시한 이후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각종 보고와 관련, “충격적이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음.
 -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현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습으로 긴급 구호요원을 포함해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면서 “러시아 전투기들이 병원시설과 학교, 시장까지 공습해 10월 한 달과 11월 첫 보름 동안 13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말했음.
 - 그는 또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 발생에 관한 이런 보고에 미국은 매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전날 전화통화한 사실을 전하면서 “케리 장관이 러시아 공습으로 수백 명이 사망한 사실을 포함해 이런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 푸틴, 오바마에 “건설적 대화로 전 세계 위협에 대처”(12/31,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에게 새해를 맞아 축전을 보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 푸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지난해는 러시아와 미국 관계가 국제 안보 유지에 핵심적 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줬다.”면서 “상호 이익을 고려한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이루어나가면서 양국은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지역에서의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데 협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푸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미국 지목…“러·서방 관계악화”(1/3, 연합뉴스)
 - 지난 31일 푸틴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활동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미국이 러시아 견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러시아 연방의 국가 안보 전략’ 문서에 서명했다.
 - 문서에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 러시아 견제를 위해 세계 현안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 러시아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구체적으로 러시아는 나토의 ‘군사 활동 강화’와 ‘동맹의 확장’ 그리고 나토군이 러시아 국경 인근으로 군사 시설 이동한 것을 러시아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 이 문서에서 미국과 나토를 거론한 것은 크림반도 병합,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악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신문은 분석했으며,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방의 시각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국과 유럽이 반 헌법적 쿠데타를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도 담겼다.
 - 러시아는 아랍의 봄과 동유럽에서 번진 색깔 혁명에 대해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가 널리 퍼지면서 국내적 불안정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으며, ‘이슬람국가(IS)’의 출현에 대해서 테러리즘과 전쟁하는 몇몇 국가들의 이중적 잣대를 적용한 정책 때문이라며 서방국가의 시리아 정책도 비난했다.

아. 중·일 관계

- <위안부 타결> 中 “일본 반인도적 죄행에 책임지는 태도 보여야”(12/28,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28일 한·일 양국이 군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대해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재차 거론하며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음.

-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타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련 보도에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위안부 강제징용은 일본군국주의가 2차 대전 중 아시아 국가 등의 인민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죄행”이라고 비난했음. 또 “중국은 한결같이 일본이 마땅히 침략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책임지는 태도로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 루 대변인의 이번 논평은 중국 외교부가 그동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밝혀온 ‘원론적 입장’을 다시 한 번 반복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중국은 아직까지 한·일 양국이 타결한 합의 내용과 합의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번 역사적인 합의로 한·일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한·중 간 대일 역사공조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 中, 한·일 위안부 합의에 “日 태도 지켜보겠다.”(12/29,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한·일 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최종해결 합의와 관련, 일본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하며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일본이 침략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관련(위안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 루 대변인은 ‘중국도 일본과 위안부 문제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일본이 책임 있는 태도로 피해자의 관심을 존중해야 한다.”며 “관련 문제를 반드시 성의 있고 적절하게 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과 합의한 사항을 책임 있는 태도로 성의 있게 이행하는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며, 중국이 즉답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한국과의 합의를 성의 있게 이행한다면 자국도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협상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日, 중고무기 저가수출 검토”…중국 반발 가능성(1/1,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자국산 중고 무기를 외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음.
 -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유사한 일본 방위장비청은 국유재산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을 금지한 재정법에 예외를 두는 특례법을 마련, 무기만은 타국에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은 2017년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음.
 - 방위장비청은 신흥국과의 관계강화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법 정비를 추진 중이며, 현재 일본에 방위장비 제공을 요청중인 나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일본 주변국의 군비증강을 조장하고 역내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도쿄신문은 소개했음. 특히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동남아국가들에 일본이 무기를 제공할 경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됨.

자. 중·러 관계

- 시진핑-푸틴 새해 축전 교환…“올해도 손잡고 잘해봅시다.”(1/1, 연합뉴스)
 - 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푸틴 대통령에게 발송한 신년 인사를 통해 “신년에도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해 중·러 세대 간 우호의 평화이념을 드높이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상호 지지를 강화하자.”고 말했으며, 또 “높은 수준에 이른 정치관계를 더욱 많은 호혜공영의 협력적 성과로 변화시켜 양국 인민과 각국 인민을 행복하게 만들자.”고 강조했다.
 -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보낸 축전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해 일련의 중요한 이벤트를 (함께) 참관했고, 양국 간 고위급 만남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확대에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했다.”고 말했으며, 특히 양국이 “제2차 대전 승리 7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며 인민 간의 전통적인 우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계속 두 나라의 전반적인 관계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자고 요청했음.

- 양국은 근년 들어 수백조 원의 자금이 오가는 천연가스 공급 계약, 방공미사일과 차세대 전투기 구매계약 등을 잇달아 성사시키며 경제·군사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서방국가들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군사안보 문제를 놓고 미국 등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국 역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함.
- “러시아 선박 中 항구에 억류”…외교문제 비화 조짐(12/30, 연합뉴스)
 - 주 선양(瀋陽) 러시아총영사관은 자국의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러시아 선박 1척이 중국 랴오닝성 다롄항구에 억류돼 있으며 탑승 선원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고 중국 환구망(還球網)이 30일 보도했음.
 - 러시아총영사관 측은 자국 선박이 억류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에 있으며 숨진 선원의 시신을 옮겨 중국식 관례에 따라 화장하고 유해는 본국으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숨진 선원의 신원과 사망 원인, 선박 억류 시점, 탑승 선원 수 등의 자세한 소식은 공개되지 않았음.
 - 환구망은 러시아 연해주 공영방송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선주가 4개월 이상 급여를 주지 않았고 난방·전기·식량·연료도 보급해 주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현재 러시아 극동운수조사관리국이 선주 등을 상대로 급여체납 등에 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극동 러시아선원노조 측은 선장이나 선원으로부터 정식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차. 일·러 관계

- 日장관이 격투기스타 표도르에 벨트…푸틴 방일 분위기 조성(1/1,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러시아 격투기 스타 에밀리아넨코 표도르(39)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1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하세 히로시(馳浩) 일본 문부과학상은 지난달 31일 종합격투기 대회 ‘라이진 파이팅 월드 그랑프리 2015’가 열린 사이타마(埼玉) 슈퍼 아레나를 찾아 표도르에게 기념용 챔피언 벨트를 수여했음.
 - 프로 레슬러 출신인 하세 문부과학상은 벨트를 주면서 “격투기를 통해 일본과 러시아의 교류, 스포츠 진흥에 큰 공헌을 했다.”고 밝혔음.
 - 표도르는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며, 일본 정부는 난항을 겪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실현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날 이벤트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 14년째 ‘최악 기독교 박해국’”(12/28, 자유아시아방송)
 - 12월 25일 성탄절은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며 즐거워하는 휴일이지만, 북한의 30만여명의 기독교 신자는 올해도 성탄절을 마음껏 기념할 수 없다고 국제기독교단체인 ‘오픈 도어즈(Open Doors)’가 12월 28일 밝혔다.
 - ‘오픈 도어즈’는 다음 달 초 공개될 예정인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에서 북한이 최악의 탄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 또 북한에서는 성탄절을 마음껏 기념할 수 없지만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이 가정과 지하교회를 통해 비밀리에 성탄절을 기념한다는 설명했다.
 -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체포, 감금, 고문, 그리고 처형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오픈 도어즈’는 약 5만 명에서 7만 명의 북한 기독교인이 노동 교화소에 갇혀 있다고 설명했다.
 - 북한의 성탄절과 관련해, 데니스 헬핀 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북한의 성탄절을 꿈꾸며’라는 글을 북한 인터넷 전문 매체 ‘NK News’에 기고했음.
 - 그는 이 글을 통해 세계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북한의 주민들과 꽃제비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갈수록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인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
- CFK, 내년 북한서 B형간염 중점(12/29, 자유아시아방송)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2016년 북한에서 미화로 19만 달러의 예산으로 B형 간염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이 기구는 2천 400만 명 북한 주민의 15%가 만성적인 B형 간염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온라인 12월 활동 소식지를 통해 지난 11월 ‘개성의 제2 간염 병원’에서 새로운 B형간염 사업을 벌여 환자 132명, 평양에서 온 환자 252명을 검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 잦은 정전 등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환자들이 총 1300여 차례의 검사를 받는 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 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내년 결핵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난 11월 방북 시 북한 당국으로부터 소흥에 있는 ‘제3결핵 요양소’를 방문해 그곳에 추가 지원을 시작할 수 있을지 고려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 이 단체는 북한에서 국립 결핵 연구소를 지원하는 등 결핵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또 2016년에도 식수 시설에 11만 2천 달러를 배당하고, 수도 시설을 신설하고 노후 시설을 개보수하는 작업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온라인을 통해 밝혔다.
 - 이번 수도시설의 설치와 개보수 사업은 주로 황해남북도 내 병원들에서 진행될 예정임.
 - 이 밖에도 ‘그리스도인들의 벗들’은 2016년 태양열 조명 장비 100대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트랙터, 삼륜 화물 운반차, 오토바이 등을 농촌 지역에 제공해 주는 사업을 8만 5천 달러의 목표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임.
- 북 국경통제 강화로 주민 원성 높아(12/30, 자유아시아방송)
- 북-중 국경연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온 북한이 전례 없이 강력한 국경통제방안을 새로 내놓았다는 소식임.
 - 강도 높은 처벌규정과 함께 철조망 공사에 당 자금까지 투입하고 있어 연선작업(국경지역의 불법활동)으로 살아가던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내부소식통들이 말했다.
 - 29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강연회를 통해 불법월경과 밀수를 근절할 데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새로운 지시가 내렸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강연회에서 발표 된 국경통제의 첫 번째 조치는 불법통화에 대한 처벌”이라며 “내용에 관계없이 어떤 이유로든 불법통화가 확인되면 1분당 1년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 강화된 국경통제로 탈북에 필요한 브로커 비용은 북한과 중국사이의 강 하나를 건너는데 한화 1천 4백만원 즉 중국인민폐 5만 2천원 정도까지 올랐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중국과 인접한 국경연선에 ‘철조망’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다고 전하면서, 이 철책선은 김정은이 당자금을 풀어 중국에서 사들인 철조망으로 완성한 것이라고 언급했음.
 - 소식통은 또 “국가의 외화벌이기관이나 사법기관들은 세관을 통해 당당하게 대규모 밀수도 하고 돈벌이를 하지만 힘없는 주민들은 보따리 밀수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형편에서 당자금까지 풀어 국경을 봉쇄한 것은 주민들의 숨통을 막는 행위라고 질타했음.
- 북 주민, 새해 지원물자 강요에 불만(12/3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주민들이 지원물자 조달압력 때문에 새해의 기분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
 - 평안북도 국경지방의 30대 남성은 “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는 올해 5월까지 발전소 건설을 무조건 끝내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각 도에서 청년돌격대를 뽑느라 사람들을 추고(차출하고)있다”면서 “뽑히지 않는 청년들은 대신 장갑, 삽 등 지원물자를 바쳐야 한다”고 밝혔음.
 - 북한 중앙텔레비전은 ‘현지 방송분견대’를 통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엄동설한에도 백두산발전소 3호 건설장에서 돌격대원들이 언땅까지에 여념이 없다고 매일 같이 보도하고 있음.
 - 소식통은 “연말을 맞아 직장에서 망년회(송년회)를 해야 하는데, 지원물자와 인력을 동원하라는 소동에 반감지 않다”고 밝혔음.
 - 공장, 기업소에서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지원물자를 조달할 능력이 없어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임.
 - 그는 “도와 시군 청년동맹에서는 지원물자를 내라고 각 단위에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도에서는 수거된 지원물자를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자동차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음.
 - 북한은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되는 날이면 농촌에 퇴비를 반출하는 이른바 ‘퇴비전투’를 벌이는 관행이 있는데, 이번 2016년 새해 첫 전투날에는 지원물자를 차에 실어 보내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대대적인 선전전에 매달리고 있다는 설명임.
 -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맞아 김정은 정권 2기 진영을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백두산 3호발전소 완공을 가시적인 성과 대상으로 정하고 전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임.

- 청년동맹에 뒤질세라 북한 여성동맹도 인민군대 지원물자를 수거하느라 여맹원들을 호되게 몰아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군대식으로 명령하는 데 습관 된 여맹지도부는 각 도별로 ‘여맹돌격대’라는 것을 조직해 여성들을 각종 중노동 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노동을 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는 현금으로 내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북한인권

- 경찰, 北인권사무소 등 국내 국제기구 테러위험 관리(12/28, 연합뉴스)
 - 경찰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등 우리나라에 사무실을 둔 국제기구에 대해 테러 위험 관리에 나선다고 함.
 - 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북한인권사무소 등 국제기구 사무소 21곳을 테러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간다고 12월 28일 밝혔다.
 - 경찰이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기구 사무소를 테러 위험에 노출된 시설로 분류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는 이슬람국가(IS)가 9월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국제적 테러 위협이 커졌고, 2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하자 북한이 ‘전쟁’, ‘자멸’, ‘징벌’ 등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위협한 데 따른 것임.
 - 경찰은 국제기구 21곳에 대해 담당 지구대에서 하루 2차례 의무적으로 순찰하는 한편 정기 방호진단, 비상상황 시 단계별 안전대책 마련·즉시 대응 시스템 구축, 시설 관리자·관계기관 합동 간담회 등 안전 활동을 벌일 계획임.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북 인권 나서야”(12/31,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John Sifton) 아시아국장은 12월 31일 2016년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2년 임기로 올해부터 비상임이사국이 된 5개국은 우루과이, 일본, 이집트, 세네갈, 우크라이나 등임.
 - 시프턴 국장은 법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세네갈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나서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엔 안보리 이사국은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이외에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음.
- 시프턴 국장은 지역을 대표해 선출된 이사국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는 지도자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올해 말까지 임기가 남은 스페인과 말레이시아가 더 활발하게 북한인권 문제에 나서주길 희망했음.
- 시프턴 국장은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정 설치 등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가 인권 유린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음.
- 시프턴 국장은 인도네시아나 인도 즉 인디아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아시아에서의 비중이 큰 나라로 북한인권 개선에 더 많은 역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3. 탈북자

- 한국 인권위, 다음 달 탈북자 제도 개선 논의(12/28, 미국의소리)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에 온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해 한국 통일부에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큰 걸림돌이 바로 편견과 차별인 만큼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한다는 것임.
 -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 탈북자 면담을 통해 이들이 직업을 구할 때나 거주지 정착 과정에서 많은 차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 국가인권위원회 김재석 북한인권팀장은 다음 달 상임위원회에서 한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김 팀장은 내년 1월 상임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제도 개선 권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탈북자 정착지원 제도 개선을 한국 통일부에 권고했음.
 - 당시 결정문에는 탈북자 인식 개선 사업 강화,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 마련, 한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한 탈북자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시킬 것 등의 내용이 담겼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2년여 만에 또다시 제도 개선 권고를 검토하게 된 것은 탈북자에 대한 한국 내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실제로 한국 통일부와 탈북자 지원재단인 ‘남북하나재단’이 지난 2013년 탈북자 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 응답자 4명 중 1명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
-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관계자도 아직 일부 한국 국민들이 ‘탈북자가 곧 북한’이라는 인식을 갖고 이들을 바라보기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음.

4. 이산가족

- 특이동향 없음.

5. 납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미 NGO, 북 지하교인에 생필품지원(12/2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알파 릴리프(Alpha Relief)는 12월 29일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 1천 500여 가정에 매달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 단체의 에리카 캐슬 대변인은 북한당국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몰래 기독교를 믿는 이른바 ‘지하교회 신자’들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캐슬 대변인은 북한 전역으로 연결되는 지하교인들의 연락망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쌀과 국수 등 식량을 집중적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 캐슬 대변인은 알파 릴리프의 지원을 받는 이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식량을 전달한 경로와 지역을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북한에 매달 보내는 식량은 수천 달러 규모로 중국에서 구입해서 북한과 중국의 국경도시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고 각 지역 대표자를 통해 지하 교인들에 전달됨.
 - 캐슬 대변인은 식량 지원과 함께 치약, 비누, 감기약, 성경 등 북한에서 구할 수 없거나 비싼 물품들도 비정기적으로 북한에 보낸다고 덧붙였다.
 - 캐슬 대변인은 북한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지목하면서 북한의 지하교인과 연결된 중국 내 조직을 통해 식량을 전했고 앞으로도 북한 교인을 위한 추가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영국 NGO '내년 5월 평양에 장애인 디자인 학교 개교'(12/29, 미국의소리)
 - 북한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디자인 학교가 내년 5월 2일 평양에서 문을 옴.
 - 영국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인 '두라 인터내셔널'의 이석희 목사는 지난주 평양을 방문해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그 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 이 목사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 디자인 학교는 패션디자인과 산업디자인, 편집디자인 등 3개 학과가 먼저 수업을 시작하고, 8월에는 핸드폰용 게임디자인 학과가 추가될 예정이다.
 - 교육 과정은 2년이고, 나중에 3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각 학과 당 학생은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모집요강에 따라 내년 2월쯤 학생을 선발할 것이라고 함.
 - 이 목사는 학생 가운데 75%는 장애인 학생, 나머지 25%는 일반 학생들을 뽑아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목사는 북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자인 학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북한 측도 학교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쉽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 또한 일단 북한의 교사들을 선발해 수업을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외국인 전문가들이 디자인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교환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제사회 올해 대북 지원 4천270만 달러...대부분 영양 지원(12/30, 미국의소리)
 - 2015년 한 해 유엔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4천270만 달러로 집계됐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식량계획 WFP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 집계에 따르면 이 같은 액수는 지난해 5천100만 달러보다 17% 줄어든 것임.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은 원조국들과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액을 3천100만 달러로 집계했음.
- 하지만 이 자료에는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러시아와 중국, 호주 등의 지원과 유럽연합, 미국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지원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음.
- 2015년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독일, 호주 등 14개국임.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도 올해 북한에 상주하는 5개 유엔 기구들에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83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지난해 650만 달러에 비해 180만 달러 증가한 규모임.
- 개별 국가로 북한에 가장 많은 액수를 지원한 나라는 스위스로,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의 대북 지원 규모는 950만 달러에 달했음.
-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분유 지원으로,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를 전달했는데, 이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음.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보건 사업과 세계식량계획의 영양 지원 사업에 각각 400만 달러와 200만 달러를 지원했음.
-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독일 방문 중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하나로 유엔과 함께 모자 패키지-1천 일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올해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전체의 61%인 2천600만 달러가 식량 등 영양 지원이었고, 지원은 주로 세계식량계획과 유엔아동기금 UNICEF, 식량농업기구 FAO를 통해 이뤄졌음.

- 독 NGO, 북 향산 일대 녹화지원 성과(12/30,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의 비정부 구호단체인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는 평안북도에서 산간농법을 전수하며 향산 일대의 1천 500가정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이 단체의 게르하르트 우마허 아시아담당국장은 향산, 운산, 구장 지역 민둥산에 나무를 심거나 개간하는 지원 사업을 3년간 진행한 결과 농업생산성이 높아졌다고 12월 30일 밝혔다.
 - 우마허 국장은 지난 10월 북한을 방문한 7명의 독일 의회 의원들도 지원 현장을 방문했다면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사를 위한 토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 현장을 방문한 독일 의원들은 북한 당국이 올해 초 세계기아원조 요원 두 명에 출국 조치를 내린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도 했음.
 - 한편, 세계기아원조는 녹화사업을 비롯해 현재 북한에서 상하수도 지원사업과 씨감자 사업, 경사지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상반기부터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에서 생산성 높은 채소 씨앗을 재배해서 전국으로 보급하는 새로운 지원 사업을 시작한 바 있음.
 - 우마허 국장은 씨앗의 품종 개량사업이 끝나는 3년 후에는 일 년에 수확할 채소가 약 35만 킬로그램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음.

- 캐나다 NGO, 북한에 미량영양소 180만포 지원(12/31, 데일리NK)
 - 캐나다의 민간구호 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최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스프링클스’로 불리는 미량영양소 180만 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퍼스트 스텝스’의 수잔 리치 대표는 29일 “이번에 지원한 미량영양소가 평안남도과 강원도 내 진료소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제공된다”고 전했다.
 - ‘퍼스트 스텝스’는 앞서 지난 1월에도 어린이용 미량영양소 100만 포를 지원했고, 7월에는 임산부들을 위해서 200만 포를 지원한 바 있음.
 - ‘스프링클스’는 영양소가 함유된 가루로,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경우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퍼스트 스텝스’는 미량영양소 외에도 북한에 메주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콩은 남포시와 형제산 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에서 두유로 가공돼 지원됨.
 - 생산된 두유는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개 탁아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제공되고 있음.

- 수잔 리치 대표는 “올해 북한에 메주콩 200t과 ‘스프링클스’ 480만 포 등 60만 캐나다 달러 상당을 지원했다”며 “내년에는 지원을 더 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벅들, 올해 570만 달러 상당 대북 지원(12/31, 미국의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벅들’은 2015 회계연도에 총 57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벅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올해 기부자들로부터 현금을 비롯해 식량과 의약품, 의료기구 등 총 570만 달러 상당의 기부를 받아 북한에 지원했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벅들은 지난 5월과 8월, 11월 세 차례 방북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4곳에 수도시설을 설치했고, 환자와 병원 관계자들이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온실도 지원했음.
 - 이밖에 병원과 요양시설 12곳의 벽지와 바닥을 교체하고 창문과 문, 지붕 등 노후한 시설 개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며, 의료기구 세트와 담요, 식량 등을 지원했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벅들은 특히 올해 북한에서 새로운 B형 간염 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5일부터 24일까지 방북해 북한 보건성과 B형 간염 치료 사업과 관련된 합의서에 서명했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벅들은 내년 3월과 5월 다시 방북해 최종 치료 환자들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단체는 “북한 주민의 15% 이상이 만성 B형 간염 환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에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내년에는 간염 치료와 예방 사업을 더욱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호주, 2016년 WFP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220만 달러 기부(1/1, 미국의소리)
 - 세계식량계획은 31일 갱신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자료’에서 호주 정부로부터 22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 호주 외교부(DFAT) 대변인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이 같은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호주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난 2002년부터 직접적인 대북

- 지원을 중단하고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을 유지하고 있음.
-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은 지난 2002년부터 매년 평균 4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해 왔다고 밝혔음.
 - 세계식량계획은 호주 등 각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북한 현지 영양과자공장과 혼합가공식품공장에서 영양강화 식품을 제조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2015년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을 2016년 6월까지 연장했음.
 - 세계식량계획이 31일 갱신한 웹사이트 자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북 영양 사업을 6개월 연장하는데 2천8백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함.

8. 북한동향

- 前 美공군 무인기 조종사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항의편지(세계 여러 지역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사람들을 살해한 데 대해)를 보낸 것을 거론하며 ‘이 편지는 부정을 정의라고 광고하면서 그 막뒤에서 온갖 인권 유린행위를 다 저지르고 있는 미국을 폭로·규탄한 양심선언’이라고 비난(12.29, 중앙통신·노동신문/인권 유린 왕초를 폭로한 양심선언)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